특 집 ① 2008 축산업 결산

■ 낙농육우산업

낙농육우산업 존립을 위해서는 소비확대가 최우선 과제



배 정 식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장

■ 글머리에...

연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부터 최근 멜라민 중국산 분유 파동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올 한해 동안 전국민을 들썩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폭등한 사료 값 및 제반경비의 인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소비둔화 현상까지나타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FTA, DDA 시대에서 낙농육우산업은 그 특수성(부패성,대량성, 연속성)으로 보호·육성되어야 함에도, 늘상 국익우선과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댐으로서, 최근 우리 낙

농육우산업은 그야말로 존페의 위기에 직면 해 있다.

▶ 농가수, 사육두수 급감으로 산업기반 존립 위협

> 육우농가 또한, 농가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가구당 마리수는 약 30마리로 어느

낙농가수, 사육두수 현황

(단위: 천두, 호,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총마리수	519	497	479	464	453	445
전년대비	-4.6	-4.1	-3.7	-3.1	-2.4	-1.8
낙농가수	10,514	9,612	8,923	8,260	7,657	7,219
전년대비	-10.3	-8.6	-7.2	-7.4	-7.3	-5.7
호당두수	49.3	51.7	53.7	56.2	59.2	61.7

※ 자료: 가축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육우농가수, 사육두수 현황

(단위: 천두, 천호,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총마리수	203	193	185	178	167	172
전년대비	-	-4.9	-4.6	-3.8	-6.2	2.9
육우농가수	8.4	7.7	7.6	7.0	6.0	5.8
전년대비	-	-8.3	-1.3	-7.9	-14.3	-3.3
호당두수	24.2	24.9	24.3	25.5	27.6	29.6

※ 자료: 가축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정도 규모화 단계에 들어섰다.

우유생산량은 이미 2002년 생산제한제 (쿼터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금번 2008년 8월 16일부터 원유가가 인상(120원/ℓ) 여파로 금년도의 원유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목장 원유가(原乳價)인상되었지만...

국제곡물가 및 해상운임의 인상, 여기에 오락가락 하는 환율정책으로 사료값이 천정 부지로 올랐다. 특히, 우유생산비는 다른 축 종보다 사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생산비 의 약 60%에 육박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목장원유가 인상에 따른 제품 가 인상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 는 우려가 크다. 소비위축은 곧 농가들의 자 산인 쿼터삭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가들은 목장경영의 한계상황에 다 다라 원유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최대한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연초 유업체의 우유, 제품가 인상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농가들의 목장원유가는 인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 2월 사이에 우유, 유제품가격을 5.5~20%가량을 이미 인상한 것이다.

역대 최대규모의 낙농가들이 참여한 가운 데 국회 앞 궐기대회가 있었고, 19일간의 단 식농성, 유가공장에서의 릴레이 집회,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게 원유가 인상을 이 루었다.

원유가 인상 이후에는 소비문제가 가장 크다. 우유, 유제품 가격이 지난 연말, 연초 인상에 이어, 하반기 또 한 차례의 인상으로 우유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또다시 농가들의 쿼터삭감이 동반된다면,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목장경영 안정이라기 보다이미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삭감에 대한 피해로 더 큰 우려가 발생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특히, 원유가 협상 당시부터 정부가 낙농

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으로 초과 원유대 삭감, 나아가 버퍼물량의 단계적 폐 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진흥회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권역밖 농가들 또 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 서 농가들의 쿼터를 삭감한다는데, 일반 유 업체인들이 농가쿼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는 않을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우유생산, 소 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의해 나가기 로 했으나, 아마도 이는 올 연말 낙농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언제까지나 농가들의 물리적 인 행동으로서 우유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 다. 원유가격은 그 특수성으로 당초 농림부 의 고시 가격이었으나,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 설립이후, 낙농진흥회 이사 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낙농 진흥회 이후 두차례의 원유가 인상시 모두 농가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농성이 동반되어 야만 했다. 물론, 원유생산비 ±5%일 경우 원 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는 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유생산비 조사 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른 축종이야 농관원의 생산비(08년 부터는 현재는 통계청에서 발표된다)가 목장경영을 위한 참고자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다지만, 우 유생산비는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 문에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여야만 하는 것이다.

■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필요

05년 협회가 낙농산업발전대책(시안)을 제시한 이후, 07년도에는 장관이 직접 주재를 하여 협의를 할 정도로 지난 2~3년간은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전국단위쿼터제실시 등 농림부와 낙농육우협회간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 농가, 조합 등각 주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론없이 지지부진해지다, 올해는 원유가 인상 문제로 그야말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물론, 원유가 인상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대책협의회,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 마련, 유대산정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고, 각 주체간의 실무자간의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

국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가 불가피하며, 이는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편 이행당사자간의 의겨이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책방향에 대한 중심을 잡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전국단위쿼터제 실시에 대한점진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쿼터제의 기본원칙은 유업체와 농가간의 거래교섭력을 동등하게 해주는 것에 있고, 세계어느 나라에서도 유업체와 농가간의 합의로전국단위 쿼터제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방안으로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이 필요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 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동안 협회에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식량으로서의 북한 어린이(학생) 우유 지원, 군 급식용량 확대와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등 우유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물론, 이중에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지경이다.

특히, 연초 농림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우유(보조)급식을 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전문지를 통해09년 지원 예산 증액 문제로 농식품부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전해지기도했다.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을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들을 증가하고, 우유소비층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 비해 취약한 낙

농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도 학교우유급 식의 중요성을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부처 간 이해를 시키지 못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학교우유급식은 2세 어린이에 대한 체위 향상과 국민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방침으로 1980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별개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이야 신선우유의 공급자체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분리 실시가 불가피 하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라는 교육적인 면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우유공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우리 육우산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이 육우다. 고급육인 한우와 달 리, 국내산 육우가 가격적 측면에서 수입쇠 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학교우유급식 현황

	한 국	일 본	미국
급식율	50.5%(*07)	92.4%('06)	95%이상
급식시작년도	1981	1957	1954

· 일본 : 학교급식법에 의해 의무급식 시행, '57년부터 시유 제공

·미국: 아침·점심급식, 방학중 급식, 방과후 간식의 일부로 우유제공

· 영국 : 급식영양표준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매일 공급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일(4.18) 기준, 전월 3월 평균 대비 육우전체 경락가격이 22.7% 폭락한 반면, 알다시피 생산비는 폭등하였다. 그야말로, 육우가격 폭락과 생산비(사료값) 폭등으로 육우 농가들은 사육 의지를 상실하고 송아지 입식주저, 다수 농가가 전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한우위주의 쇠고기 정책 및 제도, 언론 홍보 등으로 인해 육우고기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이 부족하다. 그 동안 육우농가 중 심으로 육우얼굴찾기, 육우고기 시식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들은 젖소고기 또한, 수입쇠고기로 오인하여 육우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때문에 육우 농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육우자조금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그 동안 육우에 대한 정부통계 조차 없었으 니, 쉽지많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육우농가들은 육우를 산업으로 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달라 고 하고 있다. 국내쇠고기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육우가 평소 고가의 쇠고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중・서민계층 소비자가 저 렴하고 우수한 쇠고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며 완충역 할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나마 올해 육우산업의 큰 성과라 한다 면, 올해부터 국내산 육우가 군급식에 수입 육울 대체하여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농협하나로클럽에 육우 소매입점 이 들어간 것이다.

육우 군 급식은 군장병에게 국내산이면서 도 가격이 저렴한 육우를 공급함으로써, 수입 육 안전성 논란을 없애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농가들에게 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대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육우전문브랜드 및 판매처 부재에 대한 대책 또한, 지역별 육우전문 판 매장 설치로 수입쇠고기 수요층을 유입하고, 학교, 기업 등 단체급식 수요처 등을 확보하 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낙농과 육우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낙농가의 주 부산물수입인 젖소 송아지가격 또한 폭락하자, 낙농가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젖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의 경우, 쿼터제(생산제한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목장의 일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판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화우와 젖소(육우)모두를 포함시

송아지 가격

구 분	'08.3월 평균	'08.9.20일 현재	변화율
젖소초유떼기(암)	254,000원	58,313원	△77.0%
한우송아지(암)	1,941,000원	1,359,142원	△28.0%
젖소초유떼기(수)	371,000원	95,625원	△74.2%
한우송아지(수)	2,064,000원	1,510,015원	△26.8%

자료: 농협중앙회

켜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젖소(육우)가 실 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맺음말

마지막으로 협회는 08년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학교우유(보조)급식 차상위 계층확대 방침 관철,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통합,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 마련,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젖소포함, ▷육우(젖소수소)대책마련,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면세유 공급기종확대 등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중에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마도 올해처럼 우리 축산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먹거리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명칭이 바뀌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민의 몫이기도 한다. 결국 농민들의 생존권을지키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길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 다시한번 상기해보자. ₩